

제 4 교시

# 사회탐구 영역(정치와 법)

성명 김철

수험 번호

1.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(22세)은 을(45세)의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. 어느 날 갑과 병(51세)의 건물을 임차한 정(35세)이 유리창을 교체하는 계약을 맺었다. 갑과 을은 유리창을 같이 들어 옮기던 중 갑이 유리창을 놓치자 유리창이 떨어지며 무(48세)의 자동차를 파손했다. 유리창을 옮기는 과정에서 갑에 대한 을의 감독 의무 위반은 없었다. 한편 해당 사고로 인해 정이 입주가 늦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.

- ① 갑은 무에게 ~~일반~~ 불법 행위 책임을 질 것이다.
- ② 을은 정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 을은 무에게 **특수 불법 행위** 책임을 질 것이다.
- ④ 무에게 공작물 소유자인 병이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.
- ⑤ 갑과 을은 불법행위를 공모하지 않았기에 **연대**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공동불법행위 → 갑과 을, 무에게 **연대책임**

을의 사용자책임면책

채무불이행 → 을은 정에게 **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**

공동불법행위 책임

인과성립 X  
 (예) 사용자 책임은  
 공모하지 않아도 **연대책임**임  
 공범자와 **연대책임**은 무관함

갑과 을이 **위험권을** 나르다가 떨어뜨린 것을  
 설치나 **보수의 하자**가 아니므로  
**점유자 책임 성립 X** → **소유자 책임 성립 X**

참고 자료

-대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3다31137 판결

“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**관련공동성**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,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.

2. 우리 나라 헌법 기관 A~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A가 B 임명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B의 제정이 필요한 C 임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반면 B가 지명한 D 중 1명을 E가 A의 동의를 얻어 H로 임명하였습니다.

- ① 행정부와 달리 입법부의 예산안은 A가 편성한다.
- ② C 임명에는 A의 동의가 불필요하다.
- ③ E는 A와 달리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④ B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.
- ⑤ E가 내린 명령의 위헌성을 D가 소속된 기관에서도 심사할 수 있다.

주요한 힌트는 제청과 지명이었음!

i) B가 국회의이면  
A: 국회, C: 국무위원인데  
국무위원의 지명이 필요한 헌법기관 X

헌법기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고  
헌법기관을 제청 및 지명하는 헌법기관의 B는 대법원장이다.

- 따라서
- A: 국회            D: 헌법재판관
  - B: 대법원장       E: 대통령
  - C: 대법관         H: 헌법재판소장

예산안 편성은 행정부 권한

대통령은 헌법기관 이전에 자선인사에  
또는 정치활동은 다소 제한적

법관 파면 사유: 1. 탄핵  
2. 금고 이상의 형

재판 이외의  
공권력 행사에는  
헌법소원 청구 가능!

참고 자료

- 헌법재판소 2008. 1. 17.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[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]
- 헌법재판소 1990. 10. 15. 선고 89헌마178 전원재판부

-헌법 제107조 ②명령·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
-헌법재판소법 제68조 (청구사유)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대통령도 정치 활동할 수 있음



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
출처: <https://www.yna.co.kr/view/PYH20230308196700013>

[3~4]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

갑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어머니 을과 동거하는 가족이다. 교통약자법에 의하면 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이고 갑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한다. **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3항**은 특별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각종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**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았다.** 결과적으로 을이 교통약자법상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아 갑이 **헌법소원**을 청구하였다.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.

심판대상조항

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

권위계형

[헌법재판소 결정문]

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므로 일반적인 자동차 및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도 이용하기가 어렵다.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,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안전기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. 또한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서 차이가 없으므로, **해당 조항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.** 그러므로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A를 침해한다. 다만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를 기준으로 하는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**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.** 그러므로 **㉠**과 같이 결정한다.

정당한 이익이 차별적대우

평등권

3.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㉠ 헌법불합치, 따라서 정부는 시행규칙 제6조 3항을 개선입법 해야함

<보 기>

- ㉠.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~~행위~~로 인해 갑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.
- ㉡. 갑은 ㉠을 청구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밟았을 것이다. **㉠**
- ㉢. ㉠으로 인해 국회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.

헌법소원의 청구권

가) 옳을 것 처럼 보였지만

헌법불합치가 아니라 각하하였을 것임

- ㉠
- ㉡
- ㉢, ㉠
- ㉠, ㉡
- ㉠, ㉢

검査

4.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자유권의 기본권

- ㉠ A에 속하는 권리의 예로 행복추구권이 있다.
- 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.
- ㉢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.
- ㉣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.
- ㉤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A가 제한될 수 있다.

청구권

신뢰권

헌법의 기본권 중 '국제평화권' 관련

참고 자료

3번: 헌법재판소 2023. 5. 25. 선고 2019헌마1234 전원재판부 결정 [입법부작위 위헌확인]

4번: 헌법재판소 2001. 11. 29.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[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위헌확인]

“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‘인간의 권리’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,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.”

# 4 (정치와 법)

# 사회탐구 영역

5.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2008.05.16.: 갑과 을이 결혼식을 올림.  
 2010.07.04.: 을이 A를 출산  
 \* 2014.11.23.~2015.2.23.: 갑과 을의 이혼 숙려 기간  
 2015.04.07.: 갑과 을 이혼의 효력 발생  
 2016.06.14.: 갑이 병과 결혼식을 올림.  
 2020.12.24.: 갑이 단독으로 B를 친양자 입양하였음.  
 2022.08.12.: 갑과 A가 같이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A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함  
 2022.08.13.: 교통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갑도 사망함.  
 (사망 당시 A의 채무 없이 예금 6억 원이 있었고, 갑은 채무 3억에 부동산 8억 원에 예금 2억 원이 있었다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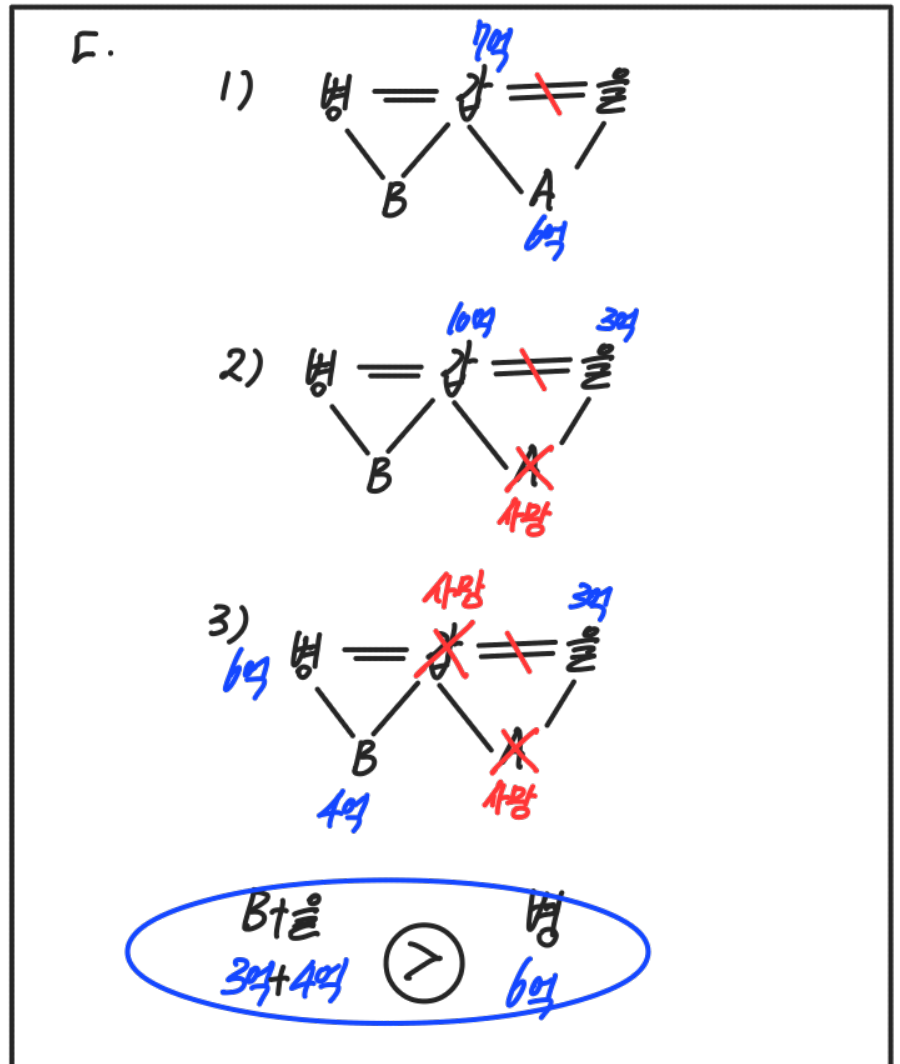
<보기>  
 ✗ A는 갑의 혼인 외의 자이다.  
 ㄴ B는 병의 친생자이다.  
 ㄷ B와 을의 상속액의 합은 병의 상속액보다 많다.

- ① ㄴ    ② ㄷ    ③ ㄱ, ㄴ    ④ ㄱ, ㄷ    ⑤ ㄴ, ㄷ

혼인상 이혼, 이혼 숙려기간 3개월 → A는 을의 친생자

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함  
 But 부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할 때는 단독으로 입양 가능!  
 따라서 병은 B의 친생자

A가 갑의 혼인 외의 자였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1개월



\* 확인 사항  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